

행 정 학

해설위원 : 김덕관

무단복사 판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답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①	②	④	②	④	③	③	④	③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③	②	①	②	①	③	①	②	①

▶ 출제영역 분포

단원	문제수	단원	문제수
행정학총론	4	재무이론	2
정책이론	4	행정환류	1
조직이론	4	지방자치론	1
인사이론	3		

▶ 문제분류 및 실력진단기준

기출문제	15	생소한 문제	4	100점 방지	1
------	----	--------	---	---------	---



실질적인 만점: 95점
고득점: 90점 이상
분발대상: 70점 이하

총평

지방직 7급을 마지막으로 올해 모든 7급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문제와 자기 자신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바랍니다. 문제 분석은 해설 강의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자기 자신의 약점은 스스로 분석하여 향후 공부계획 잡으시기 바랍니다.

매번 쉽게 출제되었던 지방직 7급도 이번에는 9급과 차별화하려는 노력이 조금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생소한 주제를 추가한 것뿐이라 기본적인 공부방법을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5문제는 이미 출제된 내용하다가 아주 쉽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75점부터 기본점수가 시작이고, 여기서 생소한 문제와 100점 방지용 문제 5개 중 3개는 내용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90점 이상이 나왔다면 고득점했다고 볼 수 있는 문제 구성이었습니다.

1. 15문제(해설 강의 참고)에서 틀린 것이 있다면 기출문제 공부에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15문제는 다 맞았는데 풀 수 있다고 한 3문제(해설 강의 참고)를 거의 다 틀렸다면 생소한 문제의 해결요령을 해설 강의를 통해 익혀주면 됩니다.

이 가이드라인대로 안 하고 생소한 문제를 전부 대비하겠다고 범위를 너무 넓히면 오히려 성적이 떨어집니다. 특히, 생소한 주제가 '조금' 추가되었을

때, 점수도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폭락'하는 분들은 1번과 2번이 둘 다 필요한 것이 이미 많은 수험생들이 망한 모든 것을 다 대비하겠다는 공부방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김덕관 유튜브 채널: 공대란짱

김덕관 네이버 카페: 김덕관 행정학

▶ 문제 및 해설

문 1.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를 둘 수 없는 기관은?

- ① 행정안전부
- ② 국회사무처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 ④ 법원행정처

<Tip>

이 문제는 인사혁신처가 설치되면서 소청심사위원회와 같은 인사 기능이 행정안전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이관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기존 기출문제에서도 '인사혁신처' 대신 '행정안전부'를 넣어 틀린 선지를 만든 문제가 있었으니 선지 ②, ③, ④와 관계없이 풀 수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암기용 해설>

① 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속

<이해용 해설>

- ① (X)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이 아닌 인사혁신처 소속이다.
- ② (O), ③ (O), ④ (O)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1252번

(2015 지방9급) 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O)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1248번

(2017 지방9급) 공무원의 사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X)

문 2.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간전문가의 고위직 임용가능성이 증가하였다.
- ②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관리를 강화하여 직위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 ③ 고위직 공무원이 다른 부처로 이동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 ④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발전과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암기용 해설>

②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관리를 강화하여 직위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성과에 의한 인사관리 강화 ⇨ 직업적 안정성 저하

<이해용 해설>

- ② (X)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은 연공서열식 인사관리를 타파하고 성과에 의한 인사관리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신분보장이 약화되어 고위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이 저하되었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1124번

(2011 지방9급, 2010 국회9급)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위공무원단의 도입목적은 고위직의 개방 확대 및 경쟁 촉진, **신분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고위직 책임성 확대 등이다. (X)
- 성과목표, 평가기준 등에 대해 계약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직무성과계약제가 시행된다. (O)

문 3. 거버넌스(Governance)에 기반한 서비스 연계망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절화로 인해 집행통제가 어려움
- ② 정보부족으로 인해 조정이 어려움
- ③ 서비스의 공동생산에 따라 책임소재가 불분명
- ④ 이해당사자 간 상호의존적인 교환의 필요성 증가

<Tip>

거버넌스에 기반한 서비스 연계망은 뉴거버넌스적 관점의 정책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해당 문제는 뉴거버넌스론에 대한 이해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암기용 해설>

- ④ ~~이해당사자 간 상호의존적인 교환의 필요성 증가~~
▶ **이해당사자 간 상호의존적인 교환: 거버넌스의 장점**

<이해용 해설>

- ① (O) 거버넌스에 기반한 서비스 연계망(정책 네트워크)에서는 다양한 정책별로 분절화되어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때문에 집행통제가 어려워진다.
- ② (O) 거버넌스에 기반한 서비스 연계망(정책 네트워크)에서는 참여자가 다양해지면서 참여자에 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조정이 어려워진다.
- ③ (O)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에 의한 공동생산은 정책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 ④ (X) 이해당사자 간 상호의존적인 교환은 거버넌스에 기반한 서비스 연계망(정책 네트워크)의 장점이다. 다양한 참여자 간 상호의존적 교환에 의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148번

(2014 국가7급)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참여자 간 신뢰와 협력을 강조한다. (O)
- 정치적 과정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는다.** (X)
- 정부만이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한다고 보지 않는다. (O)
- 정책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부문 및 비영리부문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O)

문 4.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응적 책임(responsiveness)은 공복으로서의 관료의 직책과 관련된 광범위한 도의적·자율적 책임을 의미한다.
- ② 입법국가 시절에는 외부통제에 중점을 두었으나, 행정국가로 이행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 ③ 도의적 책임(responsibility)은 국민이나 고객의 요구, 이념, 가치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하는 책임이다.
- ④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 수단으로 우리나라 국회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직무감찰, 옴부즈만 등을 행사한다.

<암기용 해설>

- ① **대응적 책임(responsiveness)**은 공복으로서의 관료의 직책과 관련된 광

범위한 도의적·자율적 책임을 의미한다.

▶ **도의적 책임(responsibility)**

- ③ **도의적 책임(responsibility)**은 국민이나 고객의 요구, 이념, 가치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하는 책임이다.

▶ **대응적 책임(responsiveness)**

- ④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 수단으로 우리나라 국회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직무감찰**, 옴부즈만 등을 행사한다.

▶ **직무감찰: 감사원의 통제수단**

<이해용 해설>

- ① (X) 공익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료의 직책과 관련된 광범위한 도의적·자율적 책임을 도의적 책임(responsibility)라고 한다.
- ② (O) 전통적인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며 외부통제에 중점을 두었으나, 행정이 전문화·복잡화되면서 행정부의 역할이 증가하고 입법부의 역할이 쇠퇴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 ③ (X) 국민이나 고객의 요구·이념·가치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하는 책임은 대응적 책임(responsiveness)이다.
- ④ (X) 직무감찰은 내부통제인 감사원의 통제수단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1641번

(2004 국회8급)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인 행정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행정이 전문성과 복잡성을 띠게 되면서 내부통제보다 **외부통제**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 (X)

문 5.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를 도입할 경우 중시해야 할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원 보수를 조정한다.
- ②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해 전문적 직무교육을 강화한다.
- ③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④ 상향식 접근방법에 기초해 공무원의 개인별 실적평가를 중시한다.

<암기용 해설>

- ④ **상향식** 접근방법에 기초해 **공무원의 개인별** 실적평가를 중시한다.
▶ **균형성과표: 조직전체의 성과관리 ⇨ 조직전체의 목표를 먼저 설정**

<이해용 해설>

- ④ (X) 균형성과표는 전략적 관리의 도구이며 조직전체의 성과관리 도구이다. 따라서 조직전체의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하향식으로 부서별 목표 및 개인별 목표를 설정해 나간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1032번

(2006 충남9급) BSC(Balanced Score Card), 즉 균형성과관리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 BSC가 MBO보다 거시적이고 포괄적이다. (O)
- **부서별 목표(하위계층 성과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조직전체**의 **목표**를 작성한다. (X)

문 6. 근무평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중화 경향-평가자가 모든 피평가자에게 대부분 중간 수준의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이다.
- ② 관대화 경향-평가 결과의 분포가 우수한 쪽에 집중되는 경향이다.
- ③ 총계적 오류-어떤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들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는 것이다.
- ④ 시간적 오류-근무평가 대상기간 초기의 업적에 영향을 크게 받는 첫머리 효과와 최근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막바지 효과로 나타난다.

<암기용 해설>

- ③ **총계적 오류**- 어떤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들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는 것이다.
▶ **규칙적 오류**

<이해용 해설>

- ③ (X) 어떤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들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는 것은 규칙적 오류이다. 총계적 오류는 평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규칙하게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는 것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1195번

(2013 서울9급, 2011 지방9급) 근무성적 평정시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는 오류는?

- 규칙적 오류(systematic) (○)
- 총계적 오류(total error) (X)

문 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 국가는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문화하여야 한다.
- 국가는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Tip>

생소한 주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항상 배운 것으로 풀려고 해야 합니다. 선지 ①은 정부업무평가와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고, 선지 ②는 보충성의 원칙일 뿐입니다. 선지 ④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남은 것은 선지 ③ 밖에 없네요. 위임사무는 아직 존재하긴 하지만 국가의 개입 여지가 크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으니 선지 ③ 내용 자체도 어울리구요.

<암기용 해설>

- ①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자치분권위원회**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 **보충성의 원칙: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 사무로 배분**

- ④ 국가는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지방자치단체 간 차등적인 자치분권정책도 가능**

<이해용 해설>

- ① (X)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은 자치분권위원회이다.
② (X)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기능배분은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가 처리하고,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④ (X) 국가는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법적·차등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문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령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획재정부장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 기획재정부장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기관장, 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권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의 범주에는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지방공단도 포함된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해 지방공기업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매년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영진단 대상 지방공기업을 선정한다.

<암기용 해설>

-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해 지방공기업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매년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영진단 대상 지방공기업**을 선정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경영진단 대상 지방공기업 선정**

<이해용 해설>

- ④ (X)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영진단 대상 지방공기업 선정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문 9. 전자적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G2G(Government, Government)에서는 그룹웨어시스템을 통한 원격지 연결, 정보 공유, 업무의 공동처리, 업무 유연성 등으로 행정의 생산성이 저하된다.
- G2C(Government, Citizen)의 관계 변화를 통해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지만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성이 낮아진다.
- G2G(Government, Government)에서는 정부부처 간,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정보를 공동활용하여 행정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거래비용이 감소한다.
- G2B(Government, Business)의 관계 변화로 정부의 정책 수행을 위한 권고, 지침전달 등을 위한 정보교류 비용이 감소하지만 조달행정 비용은 증가한다.

<암기용 해설>

- ① G2G(Government, Government)에서는 그룹웨어시스템을 통한 원격지 연결, 정보 공유, 업무의 공동처리, 업무 유연성 등으로 행정의 생산성이 **저하된다**.

▶ **G2G: 정부 생산성 증가**

- ② G2C(Government, Citizen)의 관계 변화를 통해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지만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성이 **낮아진다**.

▶ **G2C: 시민에 대한 대응성 증가**

- ④ G2B(Government, Business)의 관계 변화로 정부의 정책 수행을 위한 권고, 지침전달 등을 위한 정보교류 비용이 감소하지만 조달행정 비용은 **증가한다**.

▶ **G2B: 조달행정 비용 감소**

<이해용 해설>

- ① (X) G2G(Government, Government)에서는 그룹웨어시스템을 통한 원격지 연결, 정보 공유, 업무의 공동처리, 업무 유연성 등으로 행정의 생산성이 **증가한다**.

- ② (X) G2C(Government, Citizen)의 관계 변화를 통해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지만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성이 **높아진다**.

- ④ (X) G2B(Government, Business)의 관계 변화로 정부의 정책 수행을

위한 권고, 지침전달 등을 위한 정보교류 비용이 감소하지만 조달행정 비용은 감소한다.

문 10. 덴하르트와 덴하르트(J. V. Denhardt & R. B. Denhardt)가 제시한 신 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의 일곱 가지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 ② 방향을 잡기보다는 시민에 대해 봉사해야 한다.
- ③ 공익을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는 담론의 결과물로 인식해야 한다.
- ④ 기업주의 정신보다는 시민의식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암기용 해설>

- ①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 전략적으로 생각 ⇨ 민주적으로 행동

<이해용 해설>

- ① (X) 신공공서비스론은 민주성 달성을 위한 전략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174번

(2016 서울7급) 신공공서비스론(NP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정책 과정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문 11. 예산제도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경비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 ② 계획예산제도(PPBS)의 주요한 관심 대상은 사업의 목표이나, 투입과 산출에도 관심을 둔다.
- ③ 목표관리 예산제도(MBO)의 도입 취지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감축관리를 지향하는데 있다.
- ④ 성과주의 예산제도(PBS)에서는 국민과 의회가 정부의 사업내용과 목적을 이해하는 데 편리하다.

<암기용 해설>

- ③ **목표관리 예산제도(MBO)**의 도입 취지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감축관리를 지향하는데 있다.
▶ **영기준 예산제도(ZBB)**

<이해용 해설>

- ③ (X) 1970년대 정부의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감축관리를 지향했던 것은 영기준 예산제도(ZBB)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1480번

(2009 서울7급) 다음 중 일몰법과 영기준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일몰법과 영기준 예산은 자원난 시대에 대비하는 감축관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

문 12. 공공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예산이 부족한 경우 활용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BTO는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지만,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는 일정 기간 사용 수익권을 인정받게 된다.
- ② BTO의 경우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용료 징수로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주로 도로·철도 등 수익창출이 가능한 영역에 적용된다.
- ③ BTO의 경우 시설에 대한 수요변동 위험은 정부에서 부담하며, 정부는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을 포함한 리스크를 민간사업자에게 지출한다.

- ④ BTO는 일반적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비해 사업리스크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사업기간도 상대적으로 더 길다.

<암기용 해설>

- ③ **BTO**의 경우 시설에 대한 수요변동 위험은 정부에서 부담하며, 정부는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을 포함한 리스크를 민간사업자에게 지출한다.
▶ **BTL**

<이해용 해설>

- ③ (X) 시설에 대한 수요변동 위험은 정부에서 부담하며, 정부는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을 포함한 리스크를 민간사업자에게 지출하는 민간투자 방식은 BTL이다. BTL에서는 민간기업이 운영권을 정부에게 임대하여 주고, 운영은 정부가 하며 민간기업은 정부로부터 임대료(리스크)를 받는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301번

(2007 경북9급) 경북도청이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민간업자와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어 민자를 활용한다면 이 양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 민간기업이 공공시설을 건설한다.
- 민간기업은 이 시설을 경북도에 기부채납한다.
- 이전의 대가로 기업은 일정기간 사용권과 수익권을 획득한다.
- 기업은 이 공공시설을 경북도에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한다.

- BTL방식 (○)

문 13. 매트릭스(Matrix) 조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 활동을 기능 부문으로 전문화하는 동시에 전문화된 부문들을 프로젝트로 통합하기 위한 장치이다.
- ② 정보화 시대에서 팀제가 '규모의 경제'를 구현한 방식이라면 매트릭스 조직은 '스피드의 경제'를 보장한 방식이다.
- ③ 기존 조직구조 내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사용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 ④ 기능부서와 사업부서 간에 할거주의가 존재할 경우 원만하게 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암기용 해설>

- ② 정보화 시대에서 **팀제**가 '규모의 경제'를 구현한 방식이라면 **매트릭스 조직**은 '스피드의 경제'를 보장한 방식이다.
▶ **매트릭스 조직: '규모의 경제' 구현**
수평조직(팀제): '스피드의 경제' 구현

<이해용 해설>

- ① (○)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구조의 기능적 전문성과 사업구조의 환경적 대응성을 결합시킨 구조로, 기능부서가 기능 부문별로 전문화하는 동시에 전문화된 기능들을 사업부서가 프로젝트로 통합한다.
② (X)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구조의 '규모의 경제'를 환경이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구현한 방식이라면, 팀제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스피드의 경제'를 보장한 방식이다.
④ (○) 매트릭스 조직에서는 기능부서와 사업부서 간 협력이 안 되는 할거주의가 존재할 경우 양자 간에 원만하게 조정하기 어려워 혼란과 갈등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787번

- (2008 국가9급) 조직구조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능구조에서는 기능적 통합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제고할 수 있다. (○)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788번

- (2013 교행9급, 2011 국가9급) 매트릭스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화학적 결합을 시도하는 조직구조이다. (○)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797번

(2014 행정사) 우리나라 공공조직의 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직구성원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시킨다. (X)

문 14. 2000년대 초반 도입된 한국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현재 운영되지 않는 제도이다.
- ② 프로그램 예산분류(과목) 체계는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 ③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시 비목(품목)의 개수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비목 간 칸막이를 최대한 줄였다.
- ④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정책과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을 위해 설계·도입된 제도이다.

<암기용 해설>

①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현재 **운영되지 않는** 제도이다.

▶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 중**

<이해용 해설>

① (X) 우리나라는 현재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정부에는 2007년, 지방정부에는 2008년에 도입되었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1502번

(2016 국가7급)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2004년**부터, 중앙정부는 **2008년**부터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X)

문 15. 조직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목표의 다원화(multiplication) 및 목표의 확대(expansion)는 기존목표에 새로운 목표가 추가되거나 기존목표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말한다.
- ② 목표의 전환(diversion)은 애초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된 경우 같은 유형의 다른 목표로 교체되는 것을 말한다.
- ③ 목표의 대치(displacement)란 조직의 목표 추구가 왜곡되는 현상으로, 조직이 정당하게 추구하는 종국적 목표가 다른 목표나 수단과 뒤바뀌는 것을 말한다.
- ④ 조직의 운영상 목표는 공식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구하는 목표로, 비공식적 목표다.

<암기용 해설>

② **목표의 전환(diversion)**은 애초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된 경우 같은 유형의 다른 목표로 교체되는 것을 말한다.

▶ **목표의 승계**

<이해용 해설>

② (X) 애초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된 경우 같은 유형의 다른 목표로 교체되는 것은 목표의 승계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488번

(2010 경정승진, 2007 경남7급) 미국의 소아마비 재단(The Foundation of Infantile Paralysis)이 20년간의 활동 끝에 소아마비 예방백신 개발로 목표가 달성되자, 관절염과 불구아 출생의 예방 및 치료라는 새로운 목표를 채택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 목표의 승계 (O)

문 16. 민츠버그(Mintzberg)의 조직성장 경로모형에 따르면, 조직 내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 조직의 구조(유형)가 달라진다. 강조된 조직구성부분과 이에 상응하는 구조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략적 정점(strategic apex)-기계적 관료제 구조
- ② 핵심운영(operating core)-전문적 관료제 구조
- ③ 중간계선(middle line)-사업부제 구조
- ④ 지원참모(support staff)-애드호크라시(adhocracy)

<암기용 해설>

① **전략적 정점(strategic apex)**-기계적 관료제 구조

▶ **기계적 관료제의 핵심부분: 기술구조(기술분석부문)**

<이해용 해설>

① (X) 기계적 관료제의 핵심부분은 효율적인 작업과정을 표준화하는 기술구조(기술분석부문)이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813번

(2002 입법고시) 기계적 관료제와 구별되는 전문적 관료제(professional bureaucracy)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 조직의 **기술분석부문**에 권한이 집중된다. (X)

문 17.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이 구분한 네 가지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에 로고롤링(log-rolling) 또는 포크베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 ②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이념적 논쟁과 소득계층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표준운영절차(SOP)나 일상적 절차의 확립이 비교적 어렵다.
- ③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배분정책적 성격과 규제정책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규제정책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된다.
- ④ 보호적 규제정책(protective regulatory policy)-소비자나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집단을 규제하므로 규제집행조직과 피규제집단 간 갈등의 가능성이 높다.

<암기용 해설>

③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배분정책적 성격과 규제정책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규제정책은 거의 대부분 어려운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된다.**

▶ **규제정책: 대부분 보호적 규제정책에 해당**

<이해용 해설>

③ (X) 경쟁적 규제정책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소수에게만 수익적인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으로 배분정책과 규제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경쟁적 규제정책은 전형적인 규제정책은 아니며, 전형적인 규제정책은 대부분 보호적 규제정책에 해당된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387번

(2003 행정고시) 국내 정책의 유형과 정책집단의 관계에 대한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and Franklin)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안정적 정책집행을 위한 루틴(routine)의 가능성을 본다면 분배정책의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높으나, 보호적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의 경우에는 루틴(routine)의 확립이 어렵다. (O)
- 분배정책의 경우 반발이 별로 없으나, 보호적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발이 심하다. (O)
- 보호적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의 경우에는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강도는 **낮다**. (X)

문 18. 정책평가방법 중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연실험은 준실험(quasi-experiment)이 아닌 진실실험(true experiment)에 가까운 실험설계 방식이다.
- ② 자연실험에서는 사회실험에 비해 비용 문제나 윤리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적다.

- ③ 자연실험에서 실험 여건은 자연적인 충격(shock)뿐만 아니라 급격한 정책이나 제도변화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 ④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동시적 관계에 있을 때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실험을 이용할 수 있다.

<Tip>

자연실험에 대해 모르더라도 진실험이 가장 이상적으로 설계된 가장 인위적인 실험이라는 점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암기용 해설>

- ① 자연실험은 준실험(quasi-experiment)이 아닌 **진실험(true experiment)**에 가까운 실험설계 방식이다.

▶ **진실험: 가장 인위적인 실험**

<이해용 해설>

- ① (X) 자연실험은 인위적인 실험조작을 통한 실험이 아닌 사회현상 자체에서 만들어진 사건을 관찰하는 실험이다. 따라서 가장 인위적으로 이상적인 실험환경을 만든 진실험보다는 현실적인 준실험에 가까운 실험설계 방법이다.

문 19.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사 대상자들을 한곳에 모아 일정 기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 ② 공론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대표성 측면에서 일반 여론조사보다 우위에 있다.
- ③ 공론조사는 여론조사에 숙의와 토론과정을 보완한 것으로, 정제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정책 결정과정에서 공론조사를 도입하여 활용한 사례가 있다.

<Tip>

선지 ①, ③이 공론조사가 오랜 시간 동안 숙의와 토론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가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정답은 1개이니 선지 ①, ③과 대비되는 선지 ②를 정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암기용 해설>

- ② 공론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대표성 측면에서 일반 여론조사보다 **우위에 있다**.

▶ **공론조사: 오랜 시간 소요** ⇨ **조사 대상자가 탈락하는 경우가 많음** ⇨ **대표성 부족 우려**

<이해용 해설>

- ① (O), ② (X), ③ (O) 공론조사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에 조사 대상자간의 숙의와 토론과정을 보완한 것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가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론조사보다 대표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문 20. 재화를 배제성과 경합성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유형(A~D)으로 분류할 경우, 유형별 사례를 모두 바르게 짝지은 것은?

배제성 여부 경합성 여부	배제성 여부	
	배제성	비배제성
경합성	A	B
비경합성	C	D

- | | | | |
|-------|----------|------|--------|
| A | B | C | D |
| ① 구두 | 해저광물 | 고속도로 | 등대 |
| ② 라면 | 출근길 시내도로 | 일기예보 | 상하수도 |
| ③ 자동차 | 공공납시터 | 국방 | 무료TV방송 |
| ④ 냉장고 | 케이블TV | 목초지 | 외교 |

<암기용 해설>

A: 경합성+배제성: 시장재 - 구두

B: 경합성+비배제성: 공유재 - 해저광물

C: 비경합성+배제성: 요금제 - 고속도로

D: 비경합성+비배제성: 공공재 - 등대

<이해용 해설>

A: 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지는 재화는 시장재(사적재)이며, 구두와 같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재화를 예로 들 수 있다.

B: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는 재화는 공유재이며, 해저광물과 같은 천연자원을 예로 들 수 있다.

C: 경합성은 없으나 배제성이 있는 재화는 요금제(유료재)이며, 고속도로와 같은 재화를 예로 들 수 있다.

D: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없는 재화는 공공재(집합재)이며, 등대와 같은 재화를 예로 들 수 있다.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274번

(2014 국가9급) 경합성과 배제성을 고려할 때 공공재(public goods)에 가장 가까운 것은?

- 등대 (O)

<관련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775번

(2014 국가7급)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전기와 고속도로는 **공유재**의 성격을 가지는 공공서비스이다. (X)